

정부, '전공의 빈자리 최소화' 예비비 1285억 긴급 투입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전 심의·의결
남은 교수·전임의 당직 등 인건비로 580억
공보의·군의원 파견 59억...공공병원 393억
일반병원, 전원환자 진료시 인센티브 40억

정부가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을 위해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

은 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건부 31억원이다.
정부는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 병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 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용처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대폭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조사·군요원을 파견하는데 59억원

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에는 12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

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5억원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농약중독 치료후 자연으로 돌아가는 독수리. 지난 달 농약중독 상태로 구조된 독수리 2마리가 6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농지에서 건강한 상태로 방생되고 있다.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해야"

의뢰인과 소통 검·경 압수수색 거부할 권리

대한변호사협회가 꾸린 '국민정책제안단'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 국내 도입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 전 이 같은 내용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법정에서 제출·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과 나는 의사소통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서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정책기획단의 주장이다.
정책기획단은 "현재 추가 입법제안을 공모 중이며 정리된 이후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며 "총선 전엔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이후엔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 전달과 설명을 통해 실제 국회 입법 과정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의 위증교사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이 짜놓은 잘못된 구도에 빠져들어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유대신문 등을 통해서 진실하고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분위기로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지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 깃나폴인가"며 "ACP를 유지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협회장은 "공익소송이나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을 면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제안을 즉석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정책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해 '로복'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그 플랫폼(로복)을 통해서 온 사건의 대부분은 열 손가락 이내의 변호사들이 한 번씩 독식하는 구조였음이 밝혀졌다"며 "이 알고리즘 공개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운영과 그 결과의 수혜를 받은 분들에게 대해서는 규제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권력에 변호사 등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입법 계획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별도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 "의료인 입장에서 아무 결정권 없이 제도의 톱니바퀴로써 자신의 자리 이탈하는 자유가 전혀 없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필수 의료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에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총협회 회장 등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수권기자

의협 간부 첫 경찰 조사... "전공의 사직 교사한 적 없어"

나머지 의협 간부들도 9일, 12일 순차 조사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두려움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어 뱃뱃이 나서겠다"며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이비 관련학자들에게 돌아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가 현 사태가 마치 의사가 부족해 벌어진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만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 의기투의로 밤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놔두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배들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현직 간부 중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오는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에 고발장 열람을 요청하는 등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슬비기자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보석 석방...구속 4개월만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풀려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배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배 대표는 지난 1월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앞선 공판에서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관한 기업 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 아파르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

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결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광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단속

광주시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388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거래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이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법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

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 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나기자